

극한 내홍 치달는 5·18단체...환골탈태 필요하다

일부 공법단체 보조금 횡령 등 의혹 비리 폭로에 고소·고발전 난무 부상자·공로자회장 “우리는 바지사장” 주장 속 전 간부와 법정싸움 공로자회 비리 촉발 내부 갈등 확산...“투명 운영·책임있는 자세 절실”

일부 5·18공법단체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등 의혹(9월 8일자 광주일보 6면)이 불거지자 회원들 간 내부 비리 폭로와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내홍이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

공법단체 회장들은 자신들을 ‘바지사장이었다’며 일부 5·18부상자회 회원에게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원들은 “공법단체 회장이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경계안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

장은 13일 5·18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바지사장이었다. 양 단체는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A씨에 의해 운영됐다”고 밝혔다.

두 공법단체 회장은 A씨가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모든 공적 결정을 개입하고, 공문에 협조자로서 이름을 올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사진 등을 자기 사람으로 심거나 회유하고, 회장 고위 권한의 각종 안건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만들어 회장의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것이

다.

황 회장은 “A씨는 과거 5·18구속부상자회 시절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사비를 털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며 “지난 공로를 빌미로 사사건건 사무실에 쳐들어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A씨의 요구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두 공법단체 회장은 최근 A씨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검찰에 A씨 등 3명이 5·18부상자회 5개 지부 법인카드를 유용해 3000여만원의 횡령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 5·18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등 혐의로 정 회장에 고소됐다.

하지만 A씨는 “이사회에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특전사동지회 화해 행사나 정용성 광고 등 회장

독자적인 결정을 일삼아놓고 이제와서 바지사장이란 건 말이 안된다”며 “개인이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이사회를 능멸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국가보조금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횡령을 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5·18부상자회 이사회가 오는 15일 긴급이사회 소집에 황 회장을 직권 남용으로 징계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히자,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 상법위원회 위원 등 7명을 직권으로 해임 통보했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에 긴급이사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날 A씨 등은 황 회장의 ‘직위해제 통지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공법단체 내 갈등은 지난 7월 5·18공로자회 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급격히 커졌다.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된 공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비리가 A씨 등 일부 회원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가보훈부가 다음 달 5·18공법 3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및 수익사업 정기감사를 시행하기로 예고한 점도 양심고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양 단체 회장이 비리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기기 위해 ‘바지사장’을 자처하면서 책임 회피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공법단체로서 내부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 회장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며 “회장들이 비리 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13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 관계자 100여명을 모아 5·18시민대토론회 ‘오월의 대화’를 개최했다.

오월문제 공론화한다더니...5·18시민대토론회 ‘맹탕’ 지적

광주시의회 5·18 특위 이틀간 개최 갈등·비리 논란 등 논의조차 못해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5·18특위)가 오월 문제와 현안을 공론화하겠다고 5·18시민대토론회를 열었으나, ‘맹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특위는 13~14일 이틀에 걸쳐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시민대토론회 ‘오월의 대화’를 개최했다.

13일에는 지역 청년·학생 등 100여명을 모아 5·18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부터 사회적 인식, 교육 등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14일 2차 토론회에서는 5·18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우리가 생각하는 오월 문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하지만 5·18 관련 주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한계로 부각됐다.

5·18관련단체가 총집합한 14일 토론회 주제는 ‘오월 문제란 무엇인가’, ‘5·18기념행사는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두 가지였다.

이 중 ‘오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월 5·18공법단체와 특전사동지회가 ‘공동선언서’를 한 이후 불거졌다. 5·18공법단체가 시민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식을 강행하면서 “오월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특전사들과 화해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자로 나선 정다은 시의원은 특전사동지회 관련 논의가 나오자 5·18공법단체, 시민단체 측에 한 차례씩 발언 기회를 주고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공론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지고, 앞으로 같은 논의가 이뤄질 거라면 오늘은 더 이상 논의가 진행돼선 안된다”는 이유였다.

결국 토론회 참가자들은 5·18공법단체의 시민

단체와 갈등, ‘당사자주의’ 및 5·18 사유화, 내부 비리 논란, 5·18행사위 불법 단체 규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

토론 방식도 각 단체의 일방적인 의견 발표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 5·18공법단체가 기준에 밝혔던 것과 동일한 입장을 한 차례씩 읽고 나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 의견을 나누거나 합의점을 찾는 등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탓에 토론회가 끝난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왜 아무 내용도 없느냐”, “똥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 끝났다”는 등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5·18특별위원회는 5·18기념사업·제도·정책·시설 정비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전국화·세계화 등 5·18관련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광주시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7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성 세입자 원룸에 몰카...건물주 아들 징역형

광주지법, 징유 4년 선고

여성 세입자가 살고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4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광주시 북구 D 원룸에 세들어 사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6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고,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B씨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적만족을 얻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통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면서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최근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내와 아들이 있고 노모가 A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반말 한다” 지인 폭행 숨지게 한 50대 구속

진도경찰, 상습 상해 혐의로

진도 명랑대첩 축제 기간에 ‘반말을 한다’며 주먹을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도경찰은 같은 마을 주민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상습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경 진도군 군내면 명랑대첩축제장 인근 컨테이너 형식의 식당 뒤편 외진 곳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뒤인 10일 숨졌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본인의 또 다른 지인에게 ‘반말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상습상해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몇차례 때리기는 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에 A씨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상해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검을 통해 폭행과 B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련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